

검찰, 이명박 구속기소... 뇌물 등 혐의

다스 횡령 범죄에 포괄일죄 적용... 직권남용·법인세 포탈 등도... “공소 유지 최선, 범죄 수익 환수”

11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가 본격화한 지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16가지 범죄 사실이 적혔다. ▲다스 비자금 등 횡령 ▲다스 법인세 포탈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 ▲삼성그룹 뇌물 수수 ▲국정원 자금 수수 ▲매관매직 관련 뇌물 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 등과 관련해서다.

먼저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 하면서 1994~2006년 다스 법인 자금 약 339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조성된 비자금은 정치활동비,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다.

그는 또 선거캠프 직원 7명 급여 4억3000만원, 개인 승용차 구매비용 5395만원을 다스 법인자금으로 지급하게 했다. 김윤옥 여사와 사용한 다스 법인카드 사용금도 5억7000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들 범죄 사실에 포괄일죄를 적용, 횡령액을 약 349억원으로 정리했다. 포괄일죄는 동일한 범죄가 수차례 반복될 경우 이를 하나의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으로 마지막 범죄가 끝난 시점을 공소시효의 시작으로 본다.

다스와 관련된 범죄 사실은 이뿐만



한동훈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3차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110억원 대 뇌물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지명 후인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기간 삼성전자가 지급한 585만달러(한화 67억7400만원)를 뇌물로 봤다.

이 밖에 개인 직원이 횡령한 12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31억원 상당 법인세를 내지 않은 혐의,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정부기관을 동원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2008년 3월부터 2011년 9~10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이 관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임명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6230만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4억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5억원 ▲손병문 ABC 상사 회장 2억원 ▲지광 스님 3억원 등이다.

아울러 퇴임 이후 불법 정황이 기록된 문건을 포함해 대통령기록물 3402건을 영포발빙으로 유출, 은닉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 1월부터 강

제수사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비슷한 시기 다스 비자금 수사팀도 꾸려져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투트랙'으로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2일 구속됐고, 이후 검찰 방문 조사 등을 불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뇌물 등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나갈 것이며, 나머지 관련자들도 추후 단계적으로 기소 등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읽고 싶은 책, 도서관에 신청하세요’

전주시립도서관, ‘희망도서신청’ 서비스 시행 중

가까운 도서관에 원하는 책이 도서관에 없어 발길을 돌린 적이 있는 전주시민들은 전주시립도서관의 ‘희망도서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의 독서 욕구에 부응하는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도서관에 비치하는 ‘희망도서신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희망도서 신청’ 서비스는 도서관에 원하는 도서가 없을 때,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구입해 비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서 신청자

에게는 도착일자 알림과 우선대출 예약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희망도서 신청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onju.go.kr)를 통해 가능하며, 매주 1인당 3권씩 단행본과 전자책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단, 소장자료와 문제집, 수업서, 학습용 참고서, 출판된 지 5년이 지난 자료, 고가의 도서, 특정 종교 자료, 절판자료 등은 비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의 ‘희망도서신청’을 참고하거나 완산도서관(063-230-18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인권위원회 간담회 개최

전주시가 시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 전문가와 관련단체 관계자 등과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는 9일 전주시인권센터에서 전주시 인권위원회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센터 운영과 인권정책 추진사항, 전주시 지역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2018년도 전주시 인권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김병용 전주시인권센터장이 △인권실문조사 △인권단체초청간담회 △인권세미나 △인권오피스 활동 등 인권센터의 올해 1분기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이어, 참석 위원들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주시 미투운동 확산에 따른 여성정책 마련과 인권센터의 역할 △전주시 공무원 대상 ‘일터괴롭힘’ 설문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대책수립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시와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지역현안을 공유하고, 분야별 네트워크 소통을 강화해 가장 인간적인 인권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채규남 기자

공사 수주 벌미 3억원 받은 50대 브로커 징역 2년

공사 수주를 벌미로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배근)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억5600만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남 광주의 한 공사업체 대표와 관리자로부터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3억56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완주군이 발주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해당 업체 관계자들에게 접근한 뒤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2015년 11월 전북 완주군이 발주한 21억원 상당 규모의 완주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브로커인 B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받은 돈을 B씨에게 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돈을 준 업체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면서도 “피고인이 받은 돈의 액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직업이나 과거 경력 등을 고려하면 받은 돈은 대체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나 영입비용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가담 정도가 적다고 볼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브로커 B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행방을 뒤쫓고 있다. /이상민 기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4월까지 신고·납부해야

4전주시가 2018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정기 신고·납부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신고 대상법인 4,600여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활동에 나섰다.

2017년 12월말 결산법인은 '17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법인세 과세표준에 1%~2.2%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

농가들 전체 보험가입비 25%만 부담... 농기계 12종 대상·보험기간 1년

전주시가 농작업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시는 전주시지역 농업인이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농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농기계 종합보험의 지원내용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상해 담보 △적재농산물이며, 국비 50%, 도비 7.5%, 시비 17.5%

가 지원돼 농가들은 전체 보험가입비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지는 경운기와 광역방제기, 농용로우더, 농용동력운반차, 스피드스프레어, 승용이앙·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결속기, 농용굴삭기, 항공방제기 등 보험대상 농기계 12종을 소유·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이다. 또, 지역농협을 포함한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농업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인임을 증명할 자료를 구비해 가까운 농·축협 영업점에서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총 134건의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용으로 총 1200만원을 지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친환경농업과(063-281-5071)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허인희(1963. 9. 4.생 2018. 2. 24.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정성화 판사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의 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8-단276 상속한정승인 판사 정성화
- ▶피상속인: 망 배길수(1963. 9. 4.생 2018. 2. 24. 사망)
- ▶최후주소: 전북 완주군 이서면 갈산신동길 116
- ▶공고인: 허지윤
- ▶상속한정승인수리일: 2018. 3. 20.
- ▶공고기간: 2018. 4. 10. ~ 2018. 6. 9.
- ▶주소: (청구인 허지윤의 송달주소)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발이봉남로 4번길 3, B02호 (수내동 98-7번지 B02호) 010-9052-1121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